

“구조혁신 계획안 동참” vs “MBK 기획청산 즉각 중단하라”

〈일반노조 포함 직원 87%〉

〈마트노조〉

홈플러스 희생안 ‘내홍’

익스프레스 분할매각, 점포 폐점으로 3000억 규모 긴급 운영자금 요청
일반노조 등 직원 87%, 조건부 동의
마트노조 “알짜 사업부 헐값 매각
MBK의 안전한 투자금 회수 절차”

기업 회생 절차 10개월 차에 접어든 홈플러스가 임금 체불, 협력업체 공급 중단, 세금 체납까지 겹치며 벼랑 끝에 섰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사측과 노조가 모여 좌담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검토했지만 회생 방안을 두고 노조간 심각한 갈등이 노출됐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달 21일 예정됐던 직원 월급을 체불했다. 지난달도 월급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는 한편 전국 수십여 점포가 세금을 체납하며 압류 절차를 밟는 등 재정난에 빠진 상황이다. 납품대금 지급이 막히며 식품사들로부터 물품 공급 중단도 이어지고 있다. 납품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긴급좌담회’에서 MBK 회생계획안 성실 이행을 약속하며 회생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물량은 지난해 대비 45% 수준이다.

생존을 위협받자 일반노조와 한마음 협의회를 포함한 직원 중 87%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표했다. 지난달 29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과 40여개 적자 점포 폐점 등을 골자로 한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3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을 요청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을 내는 한편 채권단인 메리츠증권과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마트노조는 회생계획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이번 회생계획안이 홈플러스의 자생력을 파괴하는 기획된 청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계획안의 핵심인 자산 매각이 실행

될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마트노조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알짜 사업부인 익스프레스와 흑자 매장을 헐값에 매각하고 나면, 남은 것은 경쟁력을 상실한 80여 개 ‘깍뎀기 점포’뿐”이라며 “이 상태의 회사를 인수할 곳은 없다. 결국 이는 회생이 아니라 MBK의 안전한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하루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홈플러스 좌담회에선 마트노조와 일반노조 간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일반노조 위원장이 “고용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일반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구조혁신 계획안에 동참하겠다”고 밝히자 몇몇 마트노조 노조원은 아유하거나 이 위원장을 향해 어용이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업계는 설 연휴가 포함된 2월을 홈플러스 생존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사측과 한마음협의회는 “전체 직원의 87%가 동의한 구조혁신안만이 유일

한 살길”이라며 “노조의 반대로 긴급 운영자금(DIP) 3000억원 투입이 지연되면 협력사 연쇄 도산 등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금 이 적기에 수월할 경우 3년 내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흑자 전환을 통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마트노조는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은 대출 요청조차 받은 적 없다”고 확인한 점을 들어, 사측의 자금난 호소가 MBK의 먹튀를 가리기 위한 거짓 명분이라고 비난했다. 마트노조 측은 “알짜 사업부만 팔아치우려는 기획 청산을 즉각 중단하고, 캄코나 유암코 등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전환해야 고용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만명의 고용이 걸린 회생계획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협력사 이탈과 점포 압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AI 사업자, ‘AI 제작물’ 의무 표시해야… 이용자는 규제대상 제외

〈AI 제품·서비스 직접 제공〉

韓 세계 최초 ‘AI 기본법’ 전면 시행
서비스 내에서만 제공 땐 표시 유연화
다운로드·공유 시 명확히 인식 돼야

대한민국이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AI 제작물’임을 알리는 이른바 ‘AI 꼬리표’ 부착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막고 기술 활용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하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용 대상과 표시 방식까지 구체화하며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정부가 마련한 하위 가이드라인은 ‘누가, 언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서



AI 기본법 시행 첫날인 22일 서울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출입구에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이 걸려있다. /뉴시스

비스 유형별로 세분화하며 산업 현장에서 제기돼온 혼선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표시 책임을 개인 창작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귀속시킨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법안과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주

목해야 할 점은 규제의 주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이용자에게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단순한 업무 도구나 창작

〈유튜버·웹툰작가 등〉

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별 유튜버나 웹툰 작가 등 ‘이용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표시 방식은 생성물이 소비되는 환경에 따라 ‘서비스 내부’와 ‘외부 반출’로 엄격히 구분된다. 챗봇이나 게임처럼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결과물이 제공될 경우, 초기 화면 안내나 로고 표출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활용해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이 다운로드되거나 공유되어 외부로 나갈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때는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가청적 워터마크를 적용하거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메타데이터 등의 기술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빚었던 ‘AI 편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

다. 단순히 영상의 길이를 자르거나 구간을 재배치하는 ‘트리밍’ 등 생성형 AI의 본질적 기능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 편집은 표시 의무가 없다.

그러나 AI가 없는 장면을 새로 만들어 넣거나 인물의 표정과 입 모양을 보정하는 등 맥락을 재구성하는 순간 이는 ‘생성’으로 간주되어 표시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생성물인 ‘딥페이크’의 경우, 장소와 관계없이 사람이 즉각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일반 생성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허용하지만, 딥페이크만큼은 예외 없는 시각적 고지를 강제한 것이다. 이는 선거 조작이나 범죄 악용 등 AI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서현 기자 seoh@

지난해 덤핑조사 ‘역대최대’… 공급과잉·저성장 장기화 영향

무역위, 13건 접수·8건 조치 시행
철강·화학 다수… 中 제품 9건 차지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속에 저가 수입재 유입이 늘면서, 지난해 국내 덤핑조사 신청과 정부 조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덤핑조사 품목은 철강·화학제품이 다수를 차지했고, 국가별로는 중국 제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에서 무역조사실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덤핑조사 신청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1987년 무역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덤핑 신청이 본

격적으로 늘기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무역위는 글로벌 철강·화학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가 저가 범용재 중심의 불공정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OECD 기준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 능력은 2021년 4억 5000만톤에서 2024년 5억 7000만톤으로 27% 늘었고, 화학 산업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개편 중인 가운데, 중국·중동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덤핑조사 신청 품목은 철강·화학제품이 13건 중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EU(3건), 태국(2건), 일본(1건) 순이다.

무역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도 신청 사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덤핑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나 가격억속 체결 등 조치를 새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인 품목은 15개국 28개로 확대됐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베트남이 각 4건, 대만·인도네시아가 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도 크게 확대됐다. 덤핑 조사 대상 국내 시장의 평균 규모는 2025년 1조 8000억원 수준으로, 2021년 1503억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0.3% 줄었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1.0%
건설·설비투자 수출 감소 영향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3% 줄며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소비는 늘었지만 건설·설비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 내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0%였다. 한은 전망치와 동일한 것으로 직전년(2.0%)의 절반 수준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계절조정) 0.3%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원계열)로는 1.5% 증가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

차 등 재화가 줄었지만 의료 등 서비스가 늘어 전기 대비 0.3%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

반면 투자와 대외부문이 부진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이 모두 줄어 3.9%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1.8% 줄었다.

수출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감소해 2.1% 줄었다. 수입도 천연가스,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7% 감소했다.

생산측면에서도 건설업(-5.0%)과 제조업(-1.5%)이 줄었다. 전기·가스·수도사업도 전기업 감소 등으로 9.2% 축소됐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등이 늘어 0.6% 증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